

“국가 계획에 없고 예타도 안돼” 전남 SOC 사업 줄줄이 ‘제동’

〈예비타당성조사〉

남해안철도 전철화·서남해안 관광도로·광주~완도 고속도 등 전남도 “보수정부 차별 대물림·예타 정치홍정 도구 이용 말라”

내년도 국고 예산에 대한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심사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전남도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줄줄이 배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비상이 걸렸다.

〈관련기사 3면〉

배제 이유는 과거 ‘호남 예산 소외’ 대명사로 불렸던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수립된 국가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할 수 없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전남도와 지역사회는 “박근혜 정부에서 자행한 차별이 대물림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 확정예 앞서 기재부 예산 심사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기재부는 각 지자체 등과 장점 사업 또는 미결 사업에 대해 이번 주말 판 조율을 거쳐 오는 17일까지 예산안 편성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국회 심의를 위해 다음달 1일까지는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내년도 예산안을 1108건, 6조 8000억원 규모로 정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기재부 심사 과정에서 지역 숙원이자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꼭 필요한 SOC 사업들이 배제되는 분위기다. 기재부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국고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국고 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를 방문했던 김영록 전남지사도 “과거 정권에서 자행했던 호남 차별이 아직까지 발목을 잡

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박근혜 정부때 세워진 국도 5개년 계획, 철도 및 공항 계획 등에 전남 SOC 사업이 빠져 있는데다, 계획에 반영된 주요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가 수년째 미뤄지면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제동이 걸린 사업은 ▲남해안철도(목포~보성) 전철화 사업 ▲서남해안 관광도로(완도~고흥) 건설 ▲광주~완도(2단계) 고속도로 건설 사업 등이다. 또 ▲경전선(광주송정~순천) 전철화 사업 ▲광양항 나포부두 리뉴얼 사업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 사업도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며 예산 반영을 미루고 있다.

일각에서는 기재부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정치 홍정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상반기에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국회 심의 기간까지 미루고 있다는 것이다. 어차피 국고 예산에 반영하는데, 미뤄다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생색내기로 반영한다는 짚수 전략을 쓴다는 것이다.

이는 4년째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경전선 전철화 사업과 3년째인 광양항 나포부두 리뉴얼 사업이 사례다. 또한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차별 대물림’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산-목포 해안관광도로 건설, 전라선(익산~여수) 고속철도 건설, 광주~고흥 고속도로 건설, 해남 북일-강진 도암 국지도 시설 개량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사

◆ 2019년도 국비확보 문제 사업

■ 예비타당성 조사 미이행 (단위: 억원)

사업명	요청액	반영액
남해안철도(목포~보성) 전철화사업	1702	-
서남해안 관광도로(완도~고흥) 건설	예타	-
광주~완도(2단계) 고속도로 건설	예타	-

■ 예비타당성 조사 중(장기소요) (단위: 억원)

사업명	요청액	반영액
경전선(광주송정~순천) 전철화(‘14.1~)	145	-
광양항 나포부두 리뉴얼 사업(‘15.1~)	59	20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17.1~)	471	249

■ 국가 5개년 계획(도로) 및 철도망 계획

사업명	요청내용
해남북일-강진도암 국지도 개량	5차 국도 5개년 계획
부산-목포 해안관광도로 건설	#
전라선(익산~여수) 고속철도 건설	4차 국가철도망 계획
광주~고흥 고속도로 건설	2차 고속도 5년 계획

업은 과거 보수정권의 차별 속에 수립된 고속도로·국도 건설 계획과 국가철도망 계획 등에 포함되지 않아 예산을 줄 수 없다는 논리에서 차별 대물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들 사업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부터 전남도가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영남 중심의 예산 편성 탓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에도 수차례 수정 계획을 요구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전남도는 내년도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2021년부터 시행하는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2021~2025),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2021~2030), 제2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2021~2025)에 이들 사업을 수립해 줄 것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오늘立秋... 시원한 바닥분수 열대야가 이어진 6일 오후 광주시 북구 우산근린공원을 찾은 아이들이 바닥분수에서 뛰놀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이날 광주·전남지역 최고기온은 33.1~37.7도의 분포를 보였다. 기상청은 7일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문대통령 “7~8월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7월분 고지서부터 시행 지시
산자부 오늘 누진제 대책 발표

폭염 속에 전기요금 ‘폭탄’을 걱정해온 서민들의 부담이 다소간 덜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한시적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기로 했으며 여당과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식을 7일 발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백운규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 대책을 브리핑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책에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7~8월 한시적 완화와 저소득층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7~8월 한시적인 누진제 완화와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할인 확대 등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7월분 고지서부터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더 높은 요금을 적용받기 전에 사용할 수 있는 구간별 사용량을 늘리거나 구간별 요금 자체를 낮추는 것이다.

정부는 2015년과 2016년에 이 같은 방법을 활용했다. 현행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200kWh 이하인 1구간에 1kWh당 93.3원을 적용한다. 2구간(201~400kWh)에 187.9원을, 3구간(400kWh 초과)에는 280.6원을 부과한다. 또 7~8월과 12~2월에 한해 1000kWh를 초과하는 사용량에 709.5원을 부과한다.

과거 사례를 고려하면 정부가 평균적인 4인 도시가구(약 350kWh)가 해당하는 2구간 사용량을 늘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누진제 개편 전인 2016년 8월 한시적으로 7~9월 구간별 사용량을 50kWh씩 확대했다. 2015년에는 7~9월에만 누진제 4구간에 3구간 요금을 적용했다. 당시 3구간(201~300kWh)은 1kWh당 187.9원, 4구간(301~400kWh)은 280.6원을 적용했다.

“광주일보”

최진석의 老莊의 생각
- @ 쓸모 있음과 쓸모 없음 ▶18면
KIA 타이거즈 전망대
- 돌아온 핵터 부진 탈출의 ‘핵’ ▶20면

데 7~9월에는 400kWh를 사용해도 187.9원을 부과한 것이다.

당시 6개의 누진제 구간이 이후 개편으로 3개로 축소됐고 올해 재난 수준의 폭염이 계속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올해에는 2구간 사용량을 100kWh 이상 늘릴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전기요금 경감 효과와 전력수급 및 한국전력 실적 등에 미칠 영향을 검토해 구체적인 인하 방안을 마련했으며, 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당정협의에서 이를 보고할 예정이다. 누진제 완화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7월분 고지서부터 소급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2016년에도 인하 방침을 8월에 발표하고 7월까지 소급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중장기적인 누진제 개선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기무사 새 간판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준비단 출범

국군기무사령부 해체 뒤 새로 창설할 군 정보부대의 명칭이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정해졌다. 국방부 당국자는 6일 “새로 창설하는 군 정보부대의 명칭을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하기로 했다”며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을 위한 창설준비단은 이날 출범한다고 밝혔다.

1991년 이전의 보안사령부가 기무사령부로 바뀐 지 27년 만에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바뀐 것이다. 계엄령 문건 및 세월호 민간인 사찰 파문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국방부는 관보를 통해 기존의 국군기무사령부령을 폐지하고 새롭게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을 위한 준비단은 이날 공

식 출범한다. 창설준비단의 단장은 남영신 신임 기무사령관이 맡는다. 국방부 당국자는 “남 사령관 단장 체제로 20여 명이 창설준비단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령인 새 사령부령이 제정되면 창설준비단은 사령부에 속한 장군, 대령 등의 규모도 설계하게 된다.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회가 계급별로 인원을 30% 감축 하라고 권고함에 따라 현재 4200여 명인 정원은 3000명 수준, 9명인 장성은 6명 수준, 50여 명인 대령은 30명대로 각각 축소 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SWITCH TO EQ

Introducing GLC 350 e 4MATIC

#switchtoEQ

GLC 350 e 4MATIC 출시!
탁월한 퍼포먼스와 놀라운 연비를
동시에 실현한 메르세데스-벤츠의 e-Mobility.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에서 경험하세요!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2-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7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소문 서비스센터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안구 어룡대로 603(남동 20 (소문동)) 수안 서비스센터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안구 임방울대로 520(수안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GLC 350 e 4MATIC (배기량: 1,991cc, 공차중량: 2,120kg, 자중: 7t), 복합회합유모드 연비 (CS연비): 9.7km/ℓ (도시연비: 9.1km/ℓ, 고속도로연비: 10.6km/ℓ), 복합전기모드 연비 (CD연비): 2.3km/kWh (도시연비: 2.0km/kWh, 고속도로연비: 2.6km/kWh), 복합CO₂ 배출량: 92g/km, 1회 충전 주행거리: 15km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를 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